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검 토 보 고**

■ 이언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32호)

2025. 2.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제안 및 회부	1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III. 검토의견	7
1. 결의안의 제안 취지	7
2. 결의안의 발의 배경	7
2. 주요 내용 검토	8
※ 참고자료	11
1. 우리나라의 대리 제재 동참 현황	11

I. 제안 및 회부

가. 제 안 자 : 이언주의원 등 74인

나. 제안일자 : 2024년 11월 28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1월 29일

II. 주문 및 제안이유

주 문

러시아의 일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러시아의 핵 교리(핵무기 사용 규정) 개정 등 건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러-우 전쟁은 서방 국가들이 지원한 각종 무기의 각축장이 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이 그동안 금기였던 중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사용을 승인하고, 임기 만료를 앞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하는 등 전쟁은 이제 양국을 넘어 국제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태로운 기로에 서 있다.

그동안 러-우 전쟁은 양국의 산업시설과 민간인에 대한 큰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간 전 세계에 에너지난과 식량난 등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국제경제 불안을 야기하였고, 이제 급기야 국제전으로의 확전 우려로 인한 세계경제 불안과 경기 침체는 전 세계인들의 경제적 고통과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러-우 전쟁으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일촉즉발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제전으로의 확전을 막고 러-우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논의와 함께 전쟁의 빠른 종식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전쟁의 조기종식을 공약했던 트럼프의 미 대선 당선으로 인해 그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서 그로인해 한반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권 교체 시 러-우 전쟁에 대한 정책이 급변할 수 있는 가운데 한미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고려해서라도 우리 정부의 성급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면 러-우 전쟁은 순식간에 남북한 대리전으로 치달을 가능성까지 있으며, 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임은 물론이고 북핵 등 한반도 안보 위기에 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등 대한민국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한 바, 이렇게 중

차대한 시기에 정부가 신중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국민을 전쟁 위기로 몰아넣는 한편 전쟁을 확대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미 여러 국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그러한 우려가 다수여론임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므로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한국 방문을 앞둔 이 시점에, 우리 정부는 살상용 무기 지원 등 비인도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인도주의적 지원과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고 신속하게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 정부가 전쟁의 확대에 일조하는 어떠한 무기 지원도 하지 않을 것이며 러-우 전쟁의 평화적 종식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과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법을 위반하여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지지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전쟁의 피해를 줄이고 평화적으로 전쟁을 끝내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서방국가와 러시아의 무기 각축장이 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분별한 무기 사용과 무차별적인 살상으로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전쟁을 평화적으로 종식할 수 있는 국제적 협상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탬 것을 요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국제전으로 번질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북한이 이미 러시아에 파병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전쟁에 개입할 경우, 러-우 전쟁은 남북한 대리전을 치르는 전쟁터가 되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어떠한 형태의 전쟁 개입도 반대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 평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 헌법상 최우선 책무임을 분명히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 무기 지원을 배제하고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 어떠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도 국민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 정부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하루 속히 전쟁에서

벗어나 일상적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수행하여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국제 정세 안정에 기여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가격 급등은 물론 식량, 공급망, 운송망, 금융, 투자, 기술 등 양국뿐 아니라 국제 경제와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화되어 그로 인한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인구도 늘고 있음.

반면, 전쟁의 불씨는 사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서방과 러시아는 앞다투어 신형 무기를 선보이며 무력 수위를 높여가고, 임기 만료를 앞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 되살렸던 ‘한반도 외 대인지뢰 사용 금지 정책’까지 거스르며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하는 등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 역시 커지기만 함.

확전 우려로 전쟁 종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전쟁 종식을 공약했던 트럼프 당선으로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러시아 핵 교리 개정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마저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우

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등 직간접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게 된다면 자칫 남북한 대리전 양상으로 전쟁의 불씨가 한반도로 번질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심각한 상황임.

이런 가운데 지난해 이미 우회적 무기 지원을 한 바 있는 우리 정부는 향후 무기 지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한국 갤럽이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2%가 어떤 식으로든 살상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입장임.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한국 방문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기지원 등 직간접적인 모든 전쟁 개입을 배제하고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 표명이 필요함.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러-우 전쟁의 확산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확산에 일조할 수 있는 어떠한 살상 무기 지원도 하지 않고 러-우 전쟁의 평화적 종식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아울러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세계 평화를 앞당기기 위해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동 결의안을 제출함.

Ⅲ. 검토의견

1. 결의안의 제안 취지

이언주의원이 대표 발의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은 ①러시아의 침략 전쟁과 북한 전투병의 파병이 국제법을 위반한 점을 규탄하고, ② 전쟁을 평화적으로 종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상과 논의를 촉구하는 한편, ③ 해당 전쟁에 어떠한 형태의 개입도 반대하며, ④ 살상무기의 지원을 배제하고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 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수행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임.

2. 결의안의 발의 배경

2022년 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2개주(도네츠크, 루한스크)를 자치공화국으로 승인하고 해당 지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10월 헤르손, 자포리자 점령지를 확대하여 총 4개주를 자국의 영토로 병합 선언하였음.

2023년 6월 이후 이루어진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푸틴 대통령의 재선 이후 러시아의 북동부 전선 압박 및 우크

라이나 전역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세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4년 8월부터는 우크라이나가 접경지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 본토에 대한 지상공격을 실시 중이나 여전히 러시아의 반격에 직면하여 고전하고 있는 상황임.

러시아-우크라이나 양국 모두 각자의 입장¹⁾을 고수하고 있어 양국의 협상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2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10개 항목²⁾으로 구성된 평화공식을 제안하였으나 러시아는 이를 불인정하고 있어 전쟁의 장기화가 우려됨.

3. 주요 내용 검토

동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전쟁의 조기종식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촉구하는 등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향후 국제 정세의 변동에 있어 우리나라의 외교의 선택의 폭을 줄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기 위하여 각종 성명 발표 및 조치³⁾와 제재⁴⁾ 등에 동참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

1) 우크라이나의 경우 크림반도를 포함한 전 영토를 수복하며 러시아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러시아의 경우 영토 병합 및 러시아의 안보가 우려받는 것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고,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NATO 불가입, 중립, 비무장)를 주장하고 있음.

2) ①핵안전 ②식량안보 ③에너지안보 ④포로·추방자 석방 ⑤유엔 현장 이행, 우크라이나 영토보전 및 국제질서 회복 ⑥우크라이나 영토 내 러군 철수 및 적대행위 중지 ⑦정의회복 ⑧환경안전 ⑨확전방지 ⑩전쟁종식 확인

3) 외교부는 2022년부터 2024년 12월 현재까지 관련 대변인 성명을 아래와 같이 총 5회 발표함.

- 우크라이나 정세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2022.2.22.)

- 우크라이나 정세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2022.2.24)

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중장기 지원패키지⁵⁾를 마련하여 우크라이나의 재건 및 우리 기업의 관련 분야 진출을 돕고 있음.

결의안의 주문 제1조, 제2조, 제5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로운 종식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과 국제 정세 안정에 대한 기여를 주된 내용으로 하여 기존에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

결의안의 주문 제3조, 제4조는 한반도의 안보 위기 방지 및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를 위한 전쟁 개입 반대라는 측면에서 취지의 타당성이 있으나, 향후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국제사회의 공조에 발맞추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력적 대응을 제한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외교부는 미국 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의 구체화 방향에 따라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동 결의안에 대해 북한군 파병 규탄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공조 아래 필요한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라는 입장임.

-
-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관련 대변인 성명(2022.4.5.)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관련 대변인 성명(2022.10.1.)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2023.2.24.)

4) [참고자료 1] 우리나라의 제재 동참 현황

5) ○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내용

- (안보지원) 「평화공식」 회의 참여 및 「평화 정상회의」 개최지지, 식량·에너지안보 분야 국제적 기여·협력 확대
- (인도지원) 지뢰탐지기 등 안전장비와 발전기 등 지원, 세계은행 등과 협력을 통한 재정 지원
- (재건지원) EDCF를 통한 20억 불 이상 중장기 지원 패키지 마련, 우크라이나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선 지원 사업
-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1.5억불, 2024년 4억불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20억불을 지원할 예정임.

문 의 처
02) 6788-5270

[참고자료 1] 우리나라의 대러 제재 동참 현황

수출통제	금융제재
○ 전략물자* 수출허가 거부(2022.2.28.) *4대 다자수출통제체제 합의 품목 ○ 非전략물자 57개 품목 상황허가 대상 지정 (2022.3.26.) ○ 非전략물자 741개 품목 상황허가 대상으로 확대(2023.4.28.) ○ 非전략물자 682개 품목 상황허가 대상으로 확대(2024.2.24.) ○ 非전략물자 243개 품목 상황허가 대상으로 확대(2024.9.9.) ⇒ 전략물자 및 1,402개 非전략물자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거부 중 · ▲조선 ▲양자컴퓨팅 ▲전자부품 ▲승용차 및 부품 ▲반도체 장비 등	○ 러 주요 7개 은행(자회사 포함)*과의 거래 중단 및 EU 발표 7개 은행**의 SWIFT망 배제 조치 지지(2022.3.1.) *Sberbank, VEB, PSB, VTB, Otkritie, Sovcom, Novikom **Rossiya, VEB, PSB, VTB, Otkritie, Sovcom, Novikom ○ 국내 공공기관·금융기관의 러 국채 거래 중단 강력 권고(2022.3.1.) ○ 러 중앙은행·국부펀드·Rossiya 은행과의 거래 중단(2022.3.7.)